

본 자료는 법무부에서 외주 사업을 통해 번역한 문서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인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러시아 인권 보고서

개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러시아군과 당국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각종 가혹 행위를 자행했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인권 활동가들에 따르면, 당국은 신설된 법률을 동원해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독립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 반전 시위자와 야권 인사를 수감하고, 온라인에 의견을 게시한 수많은 사람을 기소했다. 또한 비정부기구(NGO)를 강제 폐쇄하고 언론 매체를 더욱 강하게 통제했으며, 정당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해외의 반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초국가적 탄압을 이어갔다. 2024년 2월에는 저명한 야권 정치인이자 반부패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Aleksey Navalny)가 가혹한 환경과 고문으로 추정되는 행위로 인해 악명 높은 외딴 교도소에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에 의한 약식 처형, 고문, 강간, 민간인 살상 공격, 민간 기반시설 파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들이 있었다. 러시아군과 관계 당국은 아동을 포함한 수천 명의 민간인을 러시아로 강제 이송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했다. 정부는 강제 노동이 포함되기도 하는 광범위한 선별 심사(filtration) 및 구금 작전 체계를 운영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Ukraine's Crimean Peninsula) 및 동부 4개 주를 점령하고 일방적 합병을 선언하면서 해당 지역 인권

2024년 인권 현황 보고서

미국 국무부 •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상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신뢰할 만한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체포 및 구금되고 재판을 받았으며 이 중 상당수가 고문을 당했다(우크라이나 *국가 인권 실태 보고서* 참조).

우크라이나 침공 외에도 러시아에서는 자의적·불법적 살인, 강제 실종, 고문 및 비인도적 처벌, 자의적 구금, 해외 체류 인사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 등 심각한 인권 유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신뢰할 만한 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정부에 의한 불법 아동 징집 및 분쟁 지역 내 가혹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언론인에 대한 폭력과 검열을 포함한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제한, 종교의 자유 억압, 강제 노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및 심각한 수준의 아동 노동 착취 문제도 함께 보고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인권 유린을 자행한 공무원을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가해자 대다수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용병들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파병 국가에서 인권을 유린했다는 보고가 잇따랐으며, 이는 신뢰할 만한 보고로 확인되었다.

러시아 당국은 이러한 인권 유린 행위를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제1장 생명권

a. 초법적 살해

2024년 한 해 동안 러시아 정부나 그 요원들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해를 저질렀다는 보고가 수없이 이어졌다.

또한 일부 교도소와 구금 시설에서 당국이 수용자들을 조직적으로 고문했으며, 이로 인해 수용자가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잇따랐다.

2024년 3월 22일, 모스크바 인근 크라스노고르스크(Krasnogorsk)의 공연장인 크로커스 시티홀(Crocus City Hall)에서 145명이 사망하는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직후, 체첸 출신의 아스카브 우스파노프(Askhab Uspanov)가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구금 중 사망했다. 러시아 당국은 그가 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체첸 반체제 단체들은 그가 매를 맞아 숨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우스파노프의 두개골과 갈비뼈, 척추가 골절된 모습이 담긴 부검 영상을 공개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정부나 그 대리 세력이 해외에 있는 반대 세력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다.

b. 강제 인구 통제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 당국에 의해 자행된 강제 낙태나 강제 불임 수술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

c.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또는 분쟁 관련 인권 침해의 증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러시아군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병력 및 당국자들이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잇따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측 인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크라이나인들을 처형 방식으로 살해했으며, 구금된 민간인을 구타하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고 모의 처형을 실시하는 등 고문을 가했다. 또한 강간을 포함한 분쟁 관련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가족과 강제로 분리된 아동을 비롯해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수많은 신빙성 있는 보고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수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와 대규모 피란민이 발생했으며, 교육·보건·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되어 공공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러시아 점령지 내에서는 자의적·불법적 살인과 강제 실종이 발생했으며, 러시아군 및 그 대리 세력에 의한 고문과 잔혹 행위 등 분쟁과 관련된 심각한 학대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한 언론인에 대한 폭력과 검열을 포함하여 표현 및 언론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되었고, 종교의 자유 역시 억압받았다. 이외에도 강제 노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독립 노동조합 금지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인 제한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러시아 점령지 내 인권 침해와 위반에 관한 더 상세한 정보는 미국 국무부의 *우크라이나 국가 인권 실태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포격과 공습으로 인해 사망했다.

2022년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등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2024년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대한 인권 유린 및 심각한 가혹 행위에 가담한 다수의 러시아 당국자들을 제재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UN Human Rights Monitoring Mission in Ukraine)과 인권 단체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인을 고문하고 초법적으로 처형한 사례를 수십 건 보고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2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바흐무트(Bakhmut)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 포로 7명을 처형했다. 또한 인권 단체들은 5월에도 러시아군이 항복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처형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군은 가혹하고 인권 침해적인 '선별 심사'를 거쳐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러시아로 강제 추방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아동을 강제로 이송하고 입양시킨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도 잇따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까지 1만 9,000명 이상의 아동이 러시아로 강제 이송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이송 및 이주에 관여한 러시아 당국자들을 제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마리아 르보바-벨로바(Maria Lvova-Belova) 아동권리담당관(Commissioner for Children's Rights)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아동을 러시아 연방으로 불법 추방 및 이송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과 점령 당국은 네 가지 방식으로 아동을 강제 이주시켰다. 첫째는 심사 과정에서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전투 중 부모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아동의 양육권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셋째는 '인도적 구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러시아나 벨라루스, 크림반도의 이른바 '여름 캠프'로 아동을 보내도록 부모를 협박하거나 강요한 뒤 아동을 돌려보내기를 거부하는 방식이며, 넷째는 시설 보호 아동의 양육권을 빼앗아 이주시키는 방식이다.

2024년 1월 4일, 푸틴 대통령은 보호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우크라이나 아동의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언론은 이 규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친족들과 정부가 해당 아동들의 양육권을 되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 예일대 공중보건대학 인도주의연구실(School of Public Health's Humanitarian Research Lab)의 2월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정부는 최소 6,000명의 아동을 러시아 점령지인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 내 재교육 및 입양 시설로 조직적으로 이주시켰다. 또한 이 연구소는 12월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강제 또는 불법 입양된 아동 314명을 확인했으며, 이 중 148명은 러시아 아동 위탁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었고 166명은 러시아 가정에 직접 위탁되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은 신체적 학대와 처벌, 고문을 자행했다. 2024년 3월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UN Human Rights Monitoring Mission in Ukrain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포로들에게 반복적인 구타, 전기 충격, 처형 위협을 가했으며, 고통스러운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게 하거나 모의 처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고문했다. 특히 해당 보고서 작성을 위해 면담한 최근 석방 포로 중 절반 이상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주요 민간 기반 시설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다.

러시아 점령지 내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은 엄격히 차단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러시아군은 시리아 지역에서도 공습을 포함한 군사 작전을 지속했다. 인권 단체들은 러시아 측 인원들이 도시 지역을 폭격하는 등 민간 시설과 민간인,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의도적으로 표적 공격했다고 보고했다. (상세 내용은 시리아 국가 인권 실태 보고서 참조)

한편,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규정 범위 내에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육군에 비무장 군사 고문단을 계속 파견해 왔다. 그러나 현지의 러시아 준군사 조직과 고문단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인권 유린을 저질렀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여성과 아동을 구타하고 강간했으며, 러시아 용병 연계 세력은 11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납치해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이러한 실태를 보도한 '데일리 비스트(Daily Beast)'의 필립 오바지 주니어(Philip Obaji Jr.) 기자는 러시아 준군사 조직과 협력하는 군인들에게 납치되어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상세 내용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국가 인권 실태 보고서 참조)

제2장 자유권

a. 언론의 자유

헌법이 언론과 기타 미디어 구성원 등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이 권리를 점점 더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지방, 지역 당국은 절차적 위반, 제한적 또는 모호한 법률 적용을 통해서 정부 또는 친정부 기관을 비판하는 자를 구금하고 괴롭히거나 기소했다. 러시아 정부는 언론에 대한 편집 통제를 통해, 대다수 시민이 주로 정부가 승인한 보도에만

노출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정부는 독립 언론사에 상당한 압박을 가해 우크라이나 전쟁, 정치범, 환경, 선거, 부패, 지방 및 연방 지도부 비판, 분리주의 또는 연방주의 등 다수 사안에 대한 보도를 심각하게 제한했다. 러시아 정부는 직접 소유하거나 또는 정부와 연계된 대형 민간 기업을 통한 간접 소유 방식으로 주요 국가 언론사 및 지역 언론사, 특히 방송사를 통제하거나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텔레비전 및 인쇄매체,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자기검열, 특히 정부 또는 정부 정책 비판 시각에 대한 검열이 만연했다.

인권 단체는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고자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 당국은 '극단주의'에 대한 모호하고 광범위한 법적 정의를 악용하여, 평화적인 시위나 특정 종교 활동까지 처벌하며 반대 세력을 억압했다. 러시아 법률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 공공질서 및 안보에 대규모 혼란을 야기하거나, 사회기반시설·교통·금융·에너지·통신 인프라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온라인 및 대중매체를 통해, 또는 시위나 공공행사 중 허위의 '사회적 중요 정보'를 유포하거나 정확한 정보로 위장한 '부정확한 사회적 중요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인권 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2024년 2월 나발니 사망 이후 모스크바 경찰은 '정치적 억압 희생자 추모비'인 루반카 광장의 솔로베츠키 비석(Solovetsky Stone)과 슬픔의 벽(Wall of Grief) 근처에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 이는 추모비에

꽃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신원을 '식별'하고 나발니를 추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 유사하게 러시아의 인터넷 지도 서비스인 2GIS도 해당 추모 시설에 이용자들이 후기를 남기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2024년 3월 11일, 대통령은 광고주가 '외국 대리인'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법안이 반전 블로거를 포함한 독립 언론의 자금줄을 끊어놓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신자의 종교적 정서를 상하게 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사회에 대한 명백한 경멸을 드러내고 신자의 종교적 감정을 모욕할 의도로 행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형이나 최대 1년의 강제 노동 또는 징역형에 처해졌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예배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져 벌금형이나 최대 3년의 강제 노동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러시아 법률은 온라인에서 국가, 정부기관, 국민, 국기,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했다.

러시아 정부는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법제화했다. 현행법은 미디어 감독 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유포'를 제한하는 등 '러시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러시아 혐오(Russophobic)' 콘텐츠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며, 특히 유튜브를 정밀 타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군사, 안보 부문 및

연방우주공사(Roscosmos State Corporation for Space Activities, Roscosmos)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포함하여,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주제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은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2024년 러시아 당국은 '미성년자의 위험 활동 가담 선동' 금지법 또는 '공공행사의 조직·개최 절차 위반' 금지법을 적용해 시위 관련 자료를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을 기소했다.

2024년 러시아 당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 금지법을 집행했다. 또한 나치 상징물과 정부가 지정한 '극단주의' 단체의 상징물을 게시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했다. 공식적인 금지 상징물 목록이나 등록부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인물의 사진이나 초상을 게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당국은 '마약류 선전'을 금지하는 법률도 함께 시행했다.

러시아 정부가 강의, 저술, 연구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학계 종사자를 제재했다는 보고가 있다.

물리적 공격, 구금, 압박

언론인들은 보도 활동을 이유로 체포, 투옥, 물리적 공격, 괴롭힘 및 협박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거나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과 블로거들은 신체적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법적 기소를 통한 생계 위협에 빈번하게 노출되었다. 또한 정부 당국자와 경찰이 언론인을 공격하거나, 보도를 방해하고 응징하기 위해 이들을 구금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특히 관찰자들에 따르면, 경찰이 보복 목적으로 언론인에게 중범죄 혐의를 씌우거나 독립 언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행위는 해당 매체를 압박하고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7일 당국은 알렉세이 나발니의 재판과 수감 생활, 그리고 장례식을 취재해 온 인터넷 뉴스 사이트 '소타비전(SotaVision)'의 기자이자 사진작가 안토니나 파보르스카야(Antonina Favorskaya)를 체포했다. 당국은 그녀와 동료 언론인 콘스탄틴 가보프, 세르게이 카렐린, 아르티옴 크리거가 나발니의 반부패재단에 관여했다며 '극단주의 단체 가담' 혐의로 기소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외신 기자들 역시 구두 협박, 비자 취소, 취재 허가 박탈, 허위 혐의에 기반한 체포 등 당국의 조직적인 압박과 괴롭힘에 직면했다.

2004년 폴 클레브니코프(Paul Klebnikov), 2006년 안나 폴리트콥스카야(Anna

Politkovskaya), 2009년 나탈리아 예스테미로바(Natalia Estemirova) 등 저명한 언론인들이 살해된 사건들과 관련하여, 2024년 현재까지도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러시아 정부, 군대, 정보기관, 경찰 병력, 범죄 조직 또는 무장 극단주의 단체 또는 반군 단체에 의한 검열

정부는 매체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직간접적인 검열을 시행했으며, 이러한 검열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정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을 제작하거나 게시한 이들에게 보복 조치를 가했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실제로 2024년 3월, 러시아 법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한 로만 이바노프(Roman Ivanov) 기자에게 군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씌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러시아 내 거의 모든 독립 언론과 반정부 성향의 매체들이 차단되거나 강제로 문을 닫았으며, 수많은 독립 비정부기구(NGO)들 역시 같은 운명을 맞았다. 크렘린궁은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정보에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2024년 2월, 모스크바 당국은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진을 1면에 실은 주간지 '소베세드니크(Sobesednik)'를 전량 압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매체 소속 기자들은 나발니의 사진을 게재한 것이 그 어떤 현행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러시아 대중 매체의 절대다수는 정부나 친정부 세력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그 외 대부분의 매체는 친정부 성향의 과두 재벌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부가 설정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가이드라인 내에서만 보도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지방의 경우, 각 주지사가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이나 관련 기구들을 통해 지역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른바 '연방 TV 채널'들은 모두 연방 정부나 친정부 세력이 지분을 전량 또는 일부 소유하고 있다. 또한 정부 소유의 언론사들은 정부 건물의 무상 임차나 세제 혜택 등 각종 특혜를 누리는 경우가 많다.

지방에서는 국영 및 친정부 성향의 TV 채널들이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에서의 송출과 콘텐츠 제작을 명목으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수많은 매체에서 국가가 편집 정책을 지시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현행법은 언론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소유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문언이 모호한 또 다른 조항은 사실상 외국인의 소유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조항들을 악용하여 독립 언론의 소유권을 친정부 과두 재벌 아래로 귀속시켜

통합하고, 외국의 지원을 받는 매체들에 압력을 가했다.

법률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언론 매체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 언론사나 개별 기자를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은 안보 기관을 포함한 정부 기구가 법원 판결 없이도 내릴 수 있다. 또한 당국은 불특정 다수에게 외신 자료를 유포하거나, 해외 자금을 지원받거나, 혹은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개인을 '외국 대리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은 외신 기자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과 양립할 수 없는 외국 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해당 기자를 외국 대리인으로 공표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권 활동가들은 「외국대리인법(Foreign Agent Law)」이 언론인, 블로거, SNS 이용자들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거나 이들을 선별적으로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개인은 반드시 법무부에 등록해야 하며, 해외 거주자가 러시아 국내에서 자료를 배포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들이 발표하는 모든 정보에는 '외국 대리인이 제작했다'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외국 대리인'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된 810개 대상 중 292개가 언론 매체나 관련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법원이 '극단주의'로 판결한 언론 매체와 웹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조직을 당국이 폐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 감독 기구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극단주의 자료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문사와 인터넷 매체에 수시로 경고를 발령했다. 1년 동안 세 차례 경고를 받으면 해당 매체의 폐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검찰총장이나 차장이 요청할 경우 로스콤나드조르는 법원의 결정 없이도 극단주의나 테러를 정당화한다고 간주되는 웹사이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다.

비국가 행위자들 역시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언론인들을 억압하려 시도했다. 한 예로, 지역 텔레그램 채널 '이제브스크 붐(Izhevsk Boom)'의 기자 알렉산드르 스크보르초프(Aleksander Skvortsov)는 2024년 1월 28일 괴한 3명에게 납치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드론 제조업체 '란셋(Lancet)'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직후 이 사건이 발생했으며, 범인들은 해당 업체와 연루된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스크보르초프는 지하실로 끌려가 손이 묶이고 입이 테이프로 봉해진 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러시아 정부는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고 모든 인터넷 통신을 감시했다. 2024년 10월 기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사유로 러시아 내에서 차단된 웹사이트는 최소 4,458개에 달하며, 이 중 3,617개가 뉴스 관련 사이트였다. 지난 6월 25일, 러시아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유럽 내 25개국 81개

매체의 웹사이트를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5월 17일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러시아의 전쟁 선전물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럽 내에서 4개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 또한, 8월에는 테러 및 이른바 극단주의 단체와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씌워 메시징 앱인 '시그널(Signal)'에 대한 접속도 차단했다.

통신사는 사용자 데이터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이를 안보 기관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관찰자들은 러시아 안보 당국이 최소한 일부 메시징 플랫폼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가로채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통신사가 암호화 기술을 우회하여 당국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른바 '백도어(backdoors)'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에 따라 러시아 내 일일 이용자 수가 50만 명을 초과하는 외국 기술 기업은 반드시 러시아 현지에 공식 대표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이러한 현지 법인 설립 의무화는 당국이 러시아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압박함으로써, 콘텐츠 제한을 포함한 각종 규제를 강제하고 벌금을 징수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었다. 만약 해당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이들이 러시아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정부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광범위한 검열을 시행했다.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인터넷 사이트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연방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포함된 항목과 같이 이미 금지된 정보나 당국이 부적절하거나 불법이라고 간주한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현행법은 검찰총장과 로스콤나드조르에 소위 극단주의 정보나 '적절한 절차를 위반하여 진행되는 대규모 대중 행사'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의 차단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더불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외설적인 표현' 및 기타 금지된 콘텐츠를 스스로 식별하여 차단 및 삭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당국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압박하여 부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게시물을 검열하고 삭제하게 하려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게시물과 콘텐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터넷 자유 감시 비정부기구(NGO)인 '로스콤스보보다(Roskomsvoboda)'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료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1만 5,000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차단되었다. 또한 로스콤스보보다가 검찰총장실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 기관에 의해 영구 차단된 웹사이트는 총 182만 개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행법은 일일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는 인터넷 검색 엔진(뉴스 집계 사이트) 운영자에게 '공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유포하기 전,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당국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갈수록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잊힐 권리'에 관한 법률 또한 시행 중인데, 이는 개인이 검색 엔진 업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이 법은 삭제 요청된 정보가 공익에 부합하거나 공적 인물과 관련된 경우에도 '잊힐 권리'를 제한하는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게시물 작성, 공유, 심지어 '좋아요'를 누른 콘텐츠의 정치적·종교적·이념적 성향 때문에 기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콘텐츠가 주요 타겟이 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다.

b. 노동자 권리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러시아 법률은 노동자가 독립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권리를 명시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으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를 사용자가 반드시 복직시켜야 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했다. 노동조합은 연방등록청(Federal Registration Service)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대개 처리 기간이 매우 길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까다로웠다. 특히 등록 거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내려질

소지가 컸다. 법적으로 노동조합은 정부, 사용자, 정당, 비정부기구(NGO)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당국은 '외국 대리인' 지정 제도를 이용해 독립 노조의 활동을 방해했다.

법률은 단체교섭에 여러 제한을 두었다. 예컨대, 사업체당 단체 협약이 하나만 허용되었으며, 최소 노동자 절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노조 연합만이 단체 교섭을 수행할 수 있었다. 법률은 노동조합 부재 시 노동자가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사업장 내 노동조합 부재 시 단체 교섭 권한의 주체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노동조합의 교섭 당사자 자격 여부 판단 시 절대적 재량권을 행사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가 더욱 제한되었다. 현역 군인, 공무원, 관세 공무원, 판사, 검사, 민간 계약직 근로자는 단결권 행사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러시아 헌법은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은 실질적으로 해당 권리를 제약한다. 사전 통지 의무, 과도한 형식적 요건, 법적 요구사항 등으로 인해 파업 행위 개시에 제약이 있는 반면, 러시아 당국은 파업을 용이하게 위법화하고 노동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노동자는 합법적 파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러시아 현행법은 필수 인력이 아닌 공무원과 필수 업종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된 산업 분야 노동자의 파업을 금지하며, 필수 공익 사업의 범위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기준보다 광범위하다. 법률은 철도, 우편, 지방 자치 단체 노동자 및 법 집행 직무

외 공무원에게 강제 중재(Compulsory Arbitration) 제도를 적용한다.

노동조합원은 파업 전 광범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용자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대 파업 및 국가 정책 관련 파업은 불법이며, 기한, 절차 등과 관련된 까다로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파업도 위법이다. 사용자는 파업 노동자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노동자는 제안된 파업과 관련하여 파업을 촉발한 노사 간 의견 차이 목록, 파업 개시 예정 일시, 기간, 예상 참여자 수, 파업 주도 단체 명칭 및 조정 절차 참여 권한 위임 대표자, 파업 중 제공될 최소 서비스 안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선언된 파업이 불법으로 판결되었음에도 강행될 경우, 법원은 사용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노조 자산을 몰수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노동고용청(Federal Labor and Employment Service, RosTrud)은 사용자의 노동법 준수를 규제하고 사용자의 '노동법 및 노동 규범 관련 기타 법령의 준수를 통제·감독'하는 책무를 수행한다. 러시아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검찰청(Prosecutor's Office), 연방노동고용청(RosTrud),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 등 다수 국가기관이 법 집행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빈번하게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보장하는 법규를 적법하게 집행하지 않았다.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조항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해당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은 시민권 관련 유사 법률 대비 경미했으며, 위반자 처벌은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사용자는 독립 노동조합 활동의 사유로 노동자에게 야간근무 배정 위협, 각종 혜택

박탈, 블랙리스트 등재, 해고 등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노동조합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반노조 활동에 참여한 관리자는 대부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대리인', '군 명예훼손'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률을 통해 노동조합원을 압박했다. 2024년 3월 러시아 검찰총장은 채굴, 에너지, 제조업 노동자를 대표하여 노동 조건 개선 및 노동조합 권리를 옹호하는 국제 산별 노동조합인 국제 통합산업 노동조합 연맹(IndustriALL Global Union)을 '바람직하지 않은(undesirable)' 조직으로 선언했다.

강제 또는 의무 노동

강제 또는 의무 노동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참조한다.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적정 노동 조건

임금 및 노동시간 관련 법률 조항

법률은 전 부문에 걸쳐 빈곤선 이상의 최저임금을 보장했다. 일부 지방 정부는 전국 기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법률은 표준 근로시간, 연장 근로, 연차 휴가 등을 규정했다.

주당 법정 노동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다. 사용자는 임신부, 18세 미만 노동자, 연방법이 지정한 기타 범주의 노동자에게 초과 노동을 요구할 수 없었다. 법률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은 최초 2시간까지는 기본 임금의 최소 150%, 그 이후로는 200% 이상을 지급해야 했다. 노동자는 초과 근무 대신 추가 휴가를 요청할 수도 있었다. 1인당 초과 근무는 이틀간 4시간, 연간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다.

임금 미지급은 벌금, 강제 노동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 범죄였으나, 모든 부문에서 임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이 만연했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이러한 임금 체불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안전보건

주요 산업 내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기준은 적절한 수준이었다. 법률은 작업장 안전과 노동자 건강을 위한 최소 조건을 설정했으나 '안전한 노동 조건'의 정의가 모호했다. 또한, 고용상의 불이익 없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이탈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법률은 러시아 내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자격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 집행

연방노동고용청(RosTrud)은 최저임금, 초과 근무,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을

담당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 노력했으나, 모든 부문을 감시하기에는 감독관 인력이 부족했다. 산업안전보건 조항의 심각한 위반과 임금 미지급은 형사 범죄에 해당했다. 관련 처벌 수위는 유사 범죄와 상응하는 수준이었으나, 실제 위반자에게 처벌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었다.

감독관은 사전 통지 없는 불시 점검과 제재를 시작할 권한이 있었지만, 실제 작업장 점검 권한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처벌의 적절성보다는 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이 노동자 권리 보호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연방노동고용청(RosTrud)는 일관된 법규 준수를 위해 추가적인 감독관 전문 교육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동 감독관이 형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회부하는 경우는 빈번했으나, 검찰청이 실제로 기소하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법원은 노동 감독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벌을 관행적으로 취소했다.

러시아 연방통계청(Rosstat)은 2021년 기준 전체 노동력의 20.3%인 약 1,500만 명이 비공식 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법과 보호 규정은 비공식 부문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c. 실종 및 납치

실종

정부 당국이나 그 대리인이 강제 실종을 자행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북캅카스(North Caucasus) 지역에서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사유로 인한 강제 실종이 지속되었다. 2024년 7월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내 미해결 강제 실종 사건은 2,149건에 달했다.

러시아 경찰이 강제 실종과 납치를 저질렀다는 보고도 있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당국이 활동가와 언론인을 강제로 실종시킨 사례들을 보고했다.

북캅카스 지역에서는 정치 활동가나 체첸 공화국 수반인 람잔 카디로프(Ramzan Kadyrov)를 비판하는 인사들에 대한 납치와 고문 보고가 이어졌다.

2024년 5월 19세 체첸인인 리야 자우르베코바(Liya Zaurbekova)가 자신에 대한 납치 시도를 생중계했으며, 이러한 납치 시도는 2022년 세다 술레이마노바(Seda Suleimanova) 및 2023년 셀리마 이스마일로바(Selima Ismailova)의 사례와 유사하다. 또한 러시아 무장 병력과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당국이 수많은 강제 실종에 관여했다는 광범위한 보고가 있었다. (우크라이나 국가 인권 실태 보고서 참조).

장기 미결구금

러시아 법률은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을 금지하고 있으나, 당국은 이러한 관행을 자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 감시단은 장기 미결구금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률상 미결구금은 통상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법원은 이를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기소된 범죄가 중대한 경우에는 12개월 또는 18개월까지도 연장이 가능했다. 구금된 반정부 인사,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종종 장기간의 미결구금에 처했다. 피구금자는 법원에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사법부 독립성 문제로 인해 판사들은 대개 수사관의 의견에 동조하며 피고인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법률에 따라 당국은 범죄 증거가 있거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 법원 승인 없이 최대 48시간 동안 용의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체포 영장이 필요했다. 영장 발부와 수색, 압수, 구금에는 사법부의 승인이 요구되었고 정부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요건을 준수했으나, 뇌물 수수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이 절차가 무력화되기도 했다.

체포 후 경찰은 대개 피구금자를 인근 경찰서로 이송하여 권리를 고지했다. 경찰은 체포 사유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구금 3시간 이내에 피구금자와 경찰관이 모두 서명해야 했다.

심문은 구금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피구금자는 심문 전 변호인과 2시간 동안 접견할 권리가 있었다. 경찰은 구금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검사가 비밀 유지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피구금자가 친지에게 전화할 기회를 주어야 했다. 경찰은 48시간 구금 기간이 만료되기 8시간 전까지 구금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보석 조건에 따라 피구금자를 석방해야 했다. 법원 심리 시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면 또는 화상으로 출석해야 했다. 한편, 법률은 교정 시설 내 통신 장비 반입을 금지하여 변호인이 의뢰인 접견 시 휴대폰이나 녹음 장비를 지참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했다.

북캅카스 지역을 제외하면 당국은 대체로 구금 제한 규정을 준수했으나, 48시간 제한을 어기거나 3시간 이내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구금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보고되었다. 경찰은 체포 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수사 기관은 이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12개월을 초과하는 연장은 내무부, 연방보안국(FSB), 조사위원회(Investigative Committee) 등 연방 수사 당국 책임자와 법원의 승인이 필요했다.

변호인들에 따르면,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2개월 수사 기한이 초과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피구금자들은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수사관들이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을 무시하고 검찰 측에 우호적인 소위 '관제 변호인(pocket attorneys)'을 임의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뢰인의 권리를 방어하기보다 본인 입회하에 의뢰인이 심문받는 것에 동의하는 역할에 그쳤다.

도서벽지의 빈곤 피고인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거의 받지 못했다. 판사들은 변호인 없이 취득한 자백을 증거에서 배제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검찰의 구금 연장 신청도 대개 승인했다. 보안 기관이 공식 등록 전 피구금자를 외부와 격리한 상태로 구금했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이는 변호인 접견 전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받았다. 이 문제는 특히 체첸 공화국에서 심각했으며, 외부와 차단된 구금이 수주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또한 당국이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시위 참가자를 식별하고 구금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체포가 발생했다. 정치인의 변호인들이 표적이 되기도 했으며 예컨대 바딤 코브제프(Vadim Kobzev), 이고르 세르구닌(Igor Sergunin), 알렉세이 립스터(Aleksey Lipster) 등 나발니의 변호인단 중 일부는 '극단주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시위나 1인 시위와 관련하여 자의적인 체포 및 구금이 다수 보고되었다. 파란색과 노란색이 들어간 옷을 입거나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빈 종이, 또는 단순히 '평화'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례도 수차례 보고되었다.

러시아군, 러시아 주도 병력,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당국이 광범위한 자의적 구금을 자행했다는 보고가 있었다(우크라이나 *국가 인권 실태 보고서* 참조).

d. 종교의 자유 침해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연례 보고서*를 참조한다. <https://www.state.gov/international-religious-freedom-reports/>

e. 인신매매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연례 보고서*를 참조한다.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제3장 신체의 안전

a.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러시아 헌법이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만한 다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보안 요원이 용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고문, 학대 및 폭력에 관여했다는 사례가 있으나, 러시아 당국이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드물었다.

보고에 따르면 보안 요원이 구금된 민간인에게 구타, 전기 충격, 모의 처형을 통한 고문을 가했으며, 강간 등 분쟁 관련 성폭력도 자행했다.

2024년 2월 16일, 주요 야당 정치인이자 반부패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Aleksey Navalny)가 외딴 교정시설인 IK-3에서 28년 형기를 복역하던 중 사망했다. 해당 형량은 석연치 않은 혐의와 불공정한 법적 절차에 의해 선고된 것으로, 이는 광범위하게 문서화된 사실이었다. 복역 기간 중 교도관들은 그의 치료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했다. 비정부기구(NGO)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IK-3은 비인도적 대우, 의료 제공 거부, 고문 전력이 있다. 나발니 사망 6개월 후 러시아 조사위원회(Investigative Committee)는 나발니의 사인이 ‘복합 질병’이며, 그 결과 형사 수사 개시 근거가 없다는 3쪽 분량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수사는 이후 재개되었으나, 2024년 연말 현재 미결 상태로 남아있다. 나발니의 아내 율리야 나발나야(Yuliya Navalnaya)와 시민사회 단체는 해당 위원회의 결론과 설명을 ‘터무니없고’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간주했다. 시민사회 단체는 러시아 교도소 당국이 알렉세이 나발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를 보고했다.

2024년 3월, 휴먼라이츠워치(HRW)와 언론은 러시아 안보 기관이 145명의 사망자를 낸 크로커스 시티홀(Crocus City Hall) 테러 공격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타지키스탄 출신 용의자 4명을 고문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성기에 대한 전기 충격, 질식, 안구 적출, 수감자의 귀를 잘라 본인에게 강제로 먹이는 행위 등 고문 실태가 기록되었다. 고위 정부 당국자들은 용의자들에 대한 폭력을 공개적으로 두둔했으나,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는 고문 의혹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러시아 경찰관의 용의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조직적이며, 통상 체포 직후 며칠 내 미결구금 시설에서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 인권 단체 및 전직 경찰관의 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전기 충격, 질식 행위, 관절 및 인대 압박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했는데, 이는 이러한 신체 학대 방식이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적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고문 및 신체적 학대는 북캅카스에서 특히 극심하게 발생했으며, 해당 지역 구금 시설에서 경찰 및 보안 기관이 무장 세력 활동 혐의자 및 민간인을 고문하거나 학대했다는 광범위한 보고가 있다. 경찰의 구타 및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도 보고되었다.

인권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경찰과 안보군은 과도한 무력과 강압적 전술로 반전 시위자 및 동원 반대 시위자를 체포했다.

보안 요원이 구금된 반정부 인사 및 인권 활동가, 언론인, 정부 정책 비판자에 대한 처벌의 한 형태로 수면 박탈을 포함한 고문을 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비정부기구(NGO)는 2024년 3월 기준 러시아 당국의 강제적 정신과 치료 남용 사례 증가로 최소 35명이 비자발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 당국은 피고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고자 정신 감정을 목적으로 구금하거나 처벌 목적으로 피고인을 정신과 치료 시설에 송치했다. 검찰관 및 공인 의료 전문가가 용의자의 강제적 정신병원 입원을 요구했다.

러시아 군 내에서 치명적이지 않은 수준의 신체적 학대 및 가혹 행위 보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인권 활동가들은 해당 가혹 행위가 공갈 계획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군, 러시아 주도군, 러시아 대리 세력 및 러시아 점령 당국이 고문, 강간 및 성적 학대에 관여했다는 보고가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 인권 실태 보고서* 참조).

러시아 안보 기관 내 면책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안보 요원이나 정부 관리가 인권 침해에 공개적으로 연루된 대부분의 경우, 러시아 당국은 내외부의 독립적 조사 요구를 거부했으며, 허위 정보 공작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해당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 재판에 회부된 소수의 사례조차 기소된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지 않는 선고로 이어졌다. 2024년 4월 러시아 항소 법원은 타타르스탄(Tatarstan) 지역에서 한 수감자를 고문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찰관 5명에 대한 2023년 유죄 판결을 취소했다. 러시아 정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 의혹 무시 경향, 불균등한 법치 적용, 그리고 사법 투명성 결여로 인해 가해자 대부분이 책임을 면했다.

2024년 1월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미콜라 카르퓨크(Mykola Karpyuk), 러시아 국적의 예브게니 부닌(Evgeny Bunin), 유리 바쿨렌코(Yuri Vakulenko)를 포함한 다수 피해 주장인에게 러시아가 고문 피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한 인권 단체는 러시아 당국이 해당 사안에 대한 실효적인 조사 및 처벌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b. 아동 보호

아동 노동

현행법은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조건에서의 노동, 지하 작업, 아동의 건강 및 도덕적 발달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16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금지했으며, 18세 미만 아동의 근로 조건을 규제했다. 다만, 14세 아동의 경우 특정 조건하에 부모나 후견인의 승인을 얻으면 노동이 허용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연방노동고용청(RosTrud)은 아동에 대한 노동 및 산업 보건 기준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기업과 단체를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 정부는 해당 법률을 선택적으로 집행했으며 위반자에 대해 가끔 처벌을 부과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른 중대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러시아 내 아동 노동 실태에 대한 국가 통계 자료는 보고된 바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노동자 수요가 증가했다. 그 결과 러시아 정부는 14세에서 24세의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 제한을 해제하고 고용 장려책을 도입했다.

아동은 전통적으로 비공식 부문이나 소매업 분야에서 노동해 왔으나, 최근 타타르스탄 지역 정부가 추진한 프로그램처럼 방위 산업 지원 사업에 아동 고용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및 외국 아동 중 일부는 상업적 성 착취의 대상이 되거나 음란물 제작, 강제 구걸에 동원되었다.

연구자들은 타타르스탄 특별경제구역 내 알라부가(Alabuga)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y Special Economic Zone of Industrial Production Type Alabuga, JSC Alabuga)가 샤헤드 136(Shahed 136) 드론의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동을 모집하고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및 학생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어린 아동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휴식이나 식사도 없이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으며, 그중에는 15세에 불과한 아동도 있었다.

아동 병사

미국 국무장관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러시아 정부군, 경찰, 기타 보안부대 및 정부 지원 무장 단체가 아동 병사를 모집하거나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연례 보고서*를 참조한다.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아동 혼인

러시아 법정 혼인 최소 연령은 18세이나, 러시아 지방 당국은 특정 상황에서 16세부터 혼인을 허가할 수 있다. 10여 개 지역에서는 임신 또는 출산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4세부터의 혼인을 허용했다. 러시아 당국은 해당 법률을 지역별로 균일하게 집행하지 않았다.

c. 난민 보호

유엔난민기구(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는 망명, 난민, 무국적자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와 실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유엔난민기구(UNHCR)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대한 접근은 "드물고 간헐적이었으며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 인권 활동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국내 실향민(IDP), 난민, 귀환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도착국 비호권 제공

러시아 법률은 망명 허가 또는 난민 지위 부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난민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비정부기구(NGO)의 보고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 러시아 이민총국(General Administration for Migration Issues) 심사관에게 약 3만 3,000루블(300달러)에 달하는 비공식 '급행료'를 관행적으로 지불했다.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신청인은 사설 통역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인권 단체들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에 도착한 신규 망명 신청자 거의 전원이 수용 인원 할당량이 찼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신청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부기구들은 긴 대기 줄과 불투명한 절차로 인해 신청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민총국은 난민 지위 및 임시 망명 신청 중 극히 적은 비율만을 승인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인의 신청은 예외적으로 잘 승인해주었다.

인권 단체들은 지난 몇 년간 러시아 정부의 난민 및 임시 망명 지위 부여 건수가 감소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정부의 조직적이고 자의적인 망명 거부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러시아 당국이 신청인들에게 출신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 당국은 시리아인에게 임시 망명을 승인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지 이주 전문가들은 임시 망명 지위를 얻은 시리아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24년 7월, 핀란드 정부는 러시아가 이주민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당국이 자국 내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핀란드 국경 월경을 부추기거나 돕고, 때로는 강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d. 반유대주의 행위 및 반유대주의 선동

유대인정책연구소(Institute for Jewish Policy Research)는 러시아 내 유대인 인구를 약 12만 3,000명으로 추산하며, 유대계 혈통을 가졌으나 본인을 유대인으로 규정하지 않는 인구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공식 추정치는 이보다 현저히 낮아, 2021년 인구 조사 당시 유대인으로 식별된 인원은 8만 2,644명이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홀로코스트(Holocaust)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가담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와 그 지지 세력을 나치 및 반유대주의자로 정기적으로 허위 묘사했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대계 혈통을 자주 비하했다. 또한 유대인을 가장 악랄한 나치라고 비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홀로코스트 역사를 조작했다. 당국은 전쟁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 반유대주의를 이용하기도 했다.

러시아 유대인 회의(Russian Jewish Congress)는 2024년 한 해 동안 유대교 종교 및 문화 시설을 대상으로 한 기물 파손 행위가 5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반유대주의 관련 사건 19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민족 증오 선동 행위에 대해서는 총 249건의 선고가 내려졌다.

러시아 내 반유대주의 사건에 관한 추가 정보, 해당 사건의 종교적 동기 유무,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향유 실태는 미국 국무부 연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https://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참조).

e. 초국가적 탄압 사례

정부는 정치적 반대 세력,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 활동가 등 자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경 밖의 개인들을 위협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자행했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 따르면, 정부는 특히 체첸과 관련하여 매우 공격적인 초국가적 탄압 활동을 전개했다. 정부는 살해를 주요 수단으로 삼아, 전직 내부 인사나 체제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아 탄압을 이어갔다.

초국가적 살해, 납치 또는 폭력이나 폭력 위협

관계 당국이 정치적 보복을 목적으로 해외 체류 인사를 살해, 납치하거나 강제 송환을 위해 폭력 및 협박을 가했다는 신뢰할 만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일례로 2024년 2월 13일, 다른 신분으로 은신 중이던 러시아군 탈영병 막심 쿠즈미노프(Maksim Kuzminov)가 스페인 비야호요사(Villajoyosa)에서 총격으로

사망했다. 스페인 언론은 살해 현장에 구 공산권 표준 탄약인 9mm 마카로프(Makarov) 탄피가 남겨져 있었다고 보도했으며, 스페인 정보기관은 러시아 당국이 해당 살해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본국 정부가 강제 송환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중앙아시아 출신 인사들의 납치 및 실종 사건에 러시아 안보 당국이 공모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다.

위협, 괴롭힘, 감시 또는 강압

정부가 가족, 친구 또는 지인을 향한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해외 체류 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보복을 시도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다. 일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여 '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원주민 활동가 파벨 술란지가(Pavel Sulyandziga)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 있는 자신의 아들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심문하며 위협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국제법 집행 수단의 오용

관계 당국이 해외 체류 중인 특정 인사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할 목적으로 국제법 집행 수단을 오용하려 했다는 신빙성 있는 보고가 있었다. 2023년 12월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NTERPOL)는 러시아 정부의 요청에 대한 심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해당 정부를 '시정 조치' 대상으로 지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공개 적색수배 중 약 절반이 모스크바 측의 요청으로 발령되었다. 감시단은 이러한

적색수배가 정치적 반대 인사나 주요 감시 대상자의 소재 파악, 구금 및 범죄인 인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의 자유 통제 시도

정부가 해외 체류 자국민의 신분 증명 서류를 무효화하거나 영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등 해외에서도 보복을 가하기 위해 이동의 자유를 통제하려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일례로 정부는 노르웨이에 거주하던 알레샤 크립초바(Alesya Krivtsova)를 비롯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의 여권을 취소했다. 이들이 여행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러시아로 귀국해야 하나, 이들 중 상당수가 귀국 시 체포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타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러시아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타국에 압력을 가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불리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도했다는 신빙성 있는 보고가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외로 망명한 반전 인사들은 정부가 타국에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을 강제 송환시킬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세르비아에 거주하는 일부 러시아인은 현지에서의 체류 자격과 관련하여 세르비아 당국으로부터 법적 제재 위협에 직면하기도 했다.

2024년 2월, 러시아 정부는 태국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러시아어권 록 밴드 비투(Bi-2) 멤버들을 러시아로 추방하도록 태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러시아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태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 목소리를 낸 예술가들의 공연이 취소된 사례가 추가로 보고되었다. 언론은 2024년 한 해 동안 다수의 러시아 활동가와 언론인이 조지아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보고했다. 인권 활동가들은 2023년 6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당국 간에 체결된 개인정보 교환 협정이 망명 중인 러시아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의 표적으로 삼거나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인 인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 활동가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10여 명 이상의 러시아 활동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러시아로 강제 추방되었다고 보고했다.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조장하기 위한 타국 정부와의 의도적인 공조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 산하 시티즌 랩(The Citizen Lab)의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발생한 러시아 배후의 초국가적 탄압 사례를 다수 보고했다. 러시아와 타지키스탄 정부는 양국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과거부터 공조해 왔다.